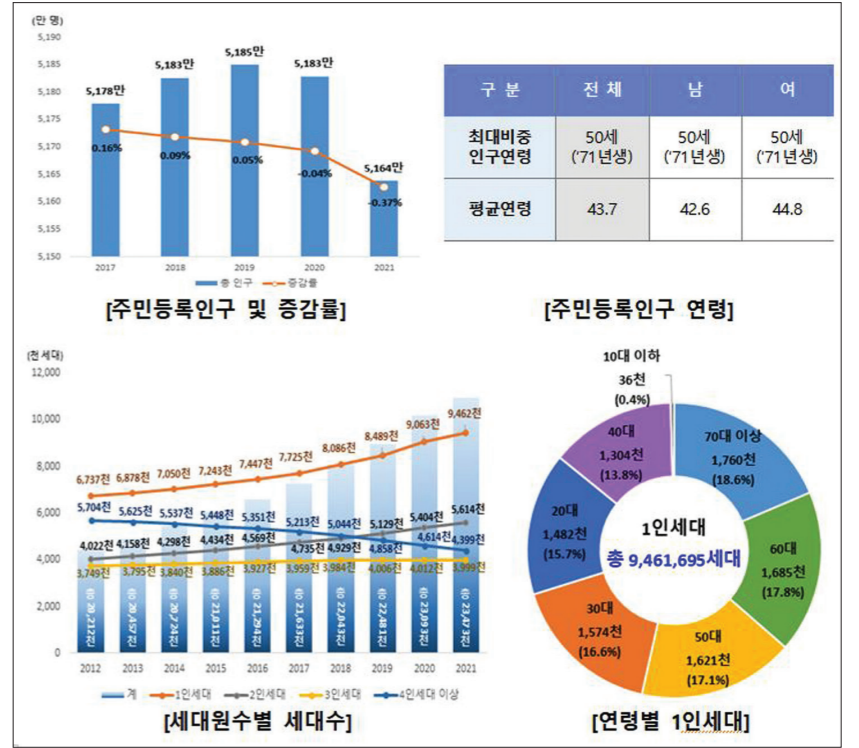


'나 혼자 산다' 1000만 가구 육박...사상 처음 40% 돌파

행안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주민등록인구 2년째 줄어...평균 43.7세
'나홀로' 946만1695세대...역대 가장 많아
1971년생(50세) 최다...1인세대 고령 많아
외국인주민 첫 감소...3045명 새 주민번호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50세가 가장 많았다. 나홀로 사는 '1인 세대' 비율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4호)'를 23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9개 통계표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주민등록세대, 보조금24, 국민서비스, 도로명, 대통령기록물 등 11개 통계표를 신규 수록했다.
세부 통계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8809명으로 전년(5182만9023명)보다 0.37%(19만214명)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주민등록인구 수가 줄어든 것이다. 감소 폭도 전년의 0.04%보다 커졌다.
지역적 요인(출생-사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데 지난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최초 시행하면서 거주불명자 14만3162명이 직권말소 조치된 영향이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평균 연령은 43.7세로 전년(43.2세)보다 0.5세 높아졌다. 여성이 44.8세로 남성(42.6세)보다 2.2세 높았다.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93만5176명)였다. 53세(1968년생)는 91만5978명, 52세(1969년생)는 91만4615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별 평균 연령은 세종이 37.7세로 가장 낮고 전남이 47.4세로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295세대로 전년(2309만3108세대)에 비해 1.64%(37만9787세대) 증가했다. 2012년부터 10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대원 수 별로는 '1인 세대'가 946만1695세대(40.3%)로 역대 가장 많았다. 4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2인 세대 23.9%(561만3943세대), 4인 세대 이상 18.7%(439만8613세대), 3인 세대 17.0%(399만8644세대)가 뒤이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9790세대)로 가장 많았다. 60대 17.8%(168만5226세대), 50대 17.1%(162만825세대), 30대 16.6%(157만4251세대), 20대 15.7%(148만1811명), 40대 13.8%(130만3807세대), 10대 이하 0.4%(3만5985명) 순이었다.
2020년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6417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많았던 전년(2019년)의 221만6612명보다 2.7%(6만195명) 줄어든 수치다. 외국인주민 수가 감소한 건 2006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이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이다.
외국인주민 수는 2006년 53만6627명에서 매년 늘어 2009년(110만6884명)에 100만명을 처음 넘어섰고 5년 후인 2014년(156만9470명)에는 150만명, 5년이 더 흘러 2018년(205만4621명)에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귀화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외국인주민의 유형별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장기체류 외국인인 169만5643명(78.7%)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9만9128명(9.2%),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26만1646명(12.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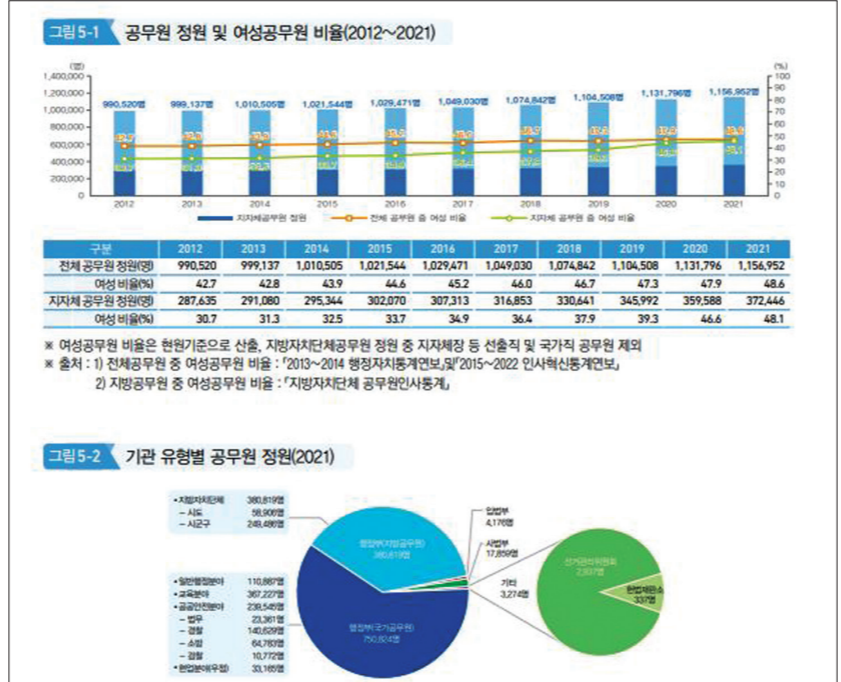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및 연령별 1인세대.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6개월 동안 국민 3045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통계연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엑셀 파일형태(xls)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

작년 공무원 115만6952명 '역대 최다'...48.6%는 여성

지자체 예산 288조...자치법규 12만개
지방세 112.8조, 2년 연속 100조 넘겨

지난해 공무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115만6952명으로 불어났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48.6%로 높아졌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288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국민서비스 알리서비스 이용량은 4억219만7993건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4호)'를 23일 발간했다. 이 통계연보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9개 통계표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주민등록세대, 보조금24, 국민서비스, 도로명, 대통령기록물 등 11개 통계표를 신규 수록했다.
세부 통계별로 보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5만6952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국가공무원 78만4506명, 지방공무원 37만2446명이다. 다만 공무원 증가 폭은 2.2%(2만5156명)로 전년의 2.8%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48.6%로 전년(47.9%)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교육 분야가 36만7227명(31.7%)으로 가장 많다. 공공안전 분야 23만9545명(20.7%), 현업분야(우정) 3만3165명(2.9%), 사법부 1만7859명(1.5%), 입법부 4176명(0.4%), 선거관리위원회 2937명(0.3%), 헌법재판소 337명(0.03%)이다.
공공안전 분야로는 경찰공무원이 14만6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공무원 6만4783명, 법무 2만3361명, 검찰 1만772명이다. 지자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39명이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에서 면적을 나눈 주민 1인당 면적은 1946.04㎡였다.
올해 지자체 예산은 288조3000억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63조1000억



공무원 정원 통계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원)보다 9.6%(2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0.5%(88조1000억원)로 가장 컸다.
지난해 지방세는 112조7984억원으로 전년보다 10.5%(10조7496억원) 늘었다. 지방세는 2013년(-0.3%)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늘어 2020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49.9%, 73.4%였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지자체 자치법규는 총 12만4896개로 집계됐다. 조례 9만8933개, 규칙 2만5963개. 경기의 자치법규가 1만9236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 1만2069개, 서울 1만1950개, 경북 1만1093개, 경남 9823개, 강원 9716개, 충남 9405개, 전북 8205개, 부산 6957개, 충북 6416개, 인천 5002개, 대구 4052개, 광주 3431개, 대전 2940개, 울산 2776개, 제주 1100개, 세종 725개 순이다.
전국 도로명 수는 16만6924건이며 가장 많은 도로명을 부여한 곳은 경기(15.9%·2만6537건)였다. 도로명은 지자체가 도로 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주민 명사에 도로명 구분 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인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안부에서 부여한다.
정부24 민원서비스는 이용 건수는 3억5720만5038건에 달했다. 신청 1억5826만8426건, 발급 1억3202만5035건, 열람 6691만1577건이다.
국민서비스 알리서비스 이용량은 총 4억219만7993건이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정보 안내' 서비스가 92.1%(3억7035만8689건)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4.2%·1695만7888건), '일반 건강검진일(암 검진일 포함) 안내'(1.6%·623만4954건) 순이었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포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